미성년 성착취물 제작한 몹쓸 어른들

경찰, 3명 구속·8명 불구속… 피해자 중엔 장애인도
'앱' 통해 "용돈 준다"며 유인한 뒤 성관계 몰카 촬영
"불법 촬영물 팔아 수익 등 챙겨… 피해자 더 많을 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거나 용돈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은 이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명을 검거해 이중 20대 남성 A씨(제주)와 50대 남성 B씨(제주), 20대 남성 C씨(도외 거주)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피해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꼬드겨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달 받았다. 또 공중화장실 등으로 청소년을 불러내 성관계를 하며 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구속된 B씨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도내 모텔 등에서 장애인 청소년 1명을 상대로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해 성을 매수하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모습을 불법 촬영하고 팔아 1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성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며 불법 촬영한 영상도 함께 적발했다.

불구속 된 나머지 8명도 직접 제작하거나 인터넷에서 얻은 성착취물을 오픈채팅방에 올려 상품권 등의 대가를 받고 유포 또는 판매,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판매했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 피해자는 4명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던 성착취물이 1명 당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에 달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승우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이 주로 피해자들과 채팅 앱으로 만나 대화를 통해 유대관계를 쌓은 뒤 범행을 벌이는 만큼 아동·청소년의 경우 채팅 앱 접근을 피하고 주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세계기록유산 등재 도전 제주4·3 기록물
문화재청 "국제적 기준 부응해야" 재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제주4·3 기록물에 대해 문화재청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한국심의위원회가 지난달 4·3 기록물 등재 신청서에 대해 보완조건으로 재심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등재 신청서 보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위원회의 보완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국제적인 심사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인류 보편적인 세계사적 중요성과 아카이브 형태의 각각의 기록물과 4·3사건과의 연관성 등에서 추가적인 논리 개발과 자료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주도는 조만간 문화재청을 찾아 정확한 보완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4·3평화재단 등과 보완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보완된 자료가 제출되면 제주4·3 기록물에 대한 재심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국가마다 2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제주4·3 기록물이 심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3월 이번 심의를 통과한 산림녹화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생산기록, 군·사법기관 재판기록 등 4·3 당시 기록과 4·3희생자 심의·결정 기록, 피해의자 증언 등 4·3이후 기록을 포함해 모두 3만 여건을 세계기록유산 등재대상으로 신청했다.

제주도는 제주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4·3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1992년부터 세계기록유산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등재 결정은 격년제로 홀수 해 진행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달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에 대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위영석기자

119구급대원 폭행 항소심도 징역 2년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화물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원심처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3시4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와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119에 의해 구급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두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3%로 면허 취소 기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상민기자

6·25길 개통식 2일 서귀포시 대정읍 해병대 제9여단 해병 3·4기호국관에서 '글라! 6·25길 개통식'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서 올해 첫 SFTS 환자 발생

도 "50대 여… 텃밭서 작업"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환자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A(여·54)씨로, 텃밭 작업 등 야외활동 이력이 확인됐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부터 몸살과 목 뒤가 붓는 증상으로 개인의원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 응급실에서 SFTS 검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27일 제주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SFTS를 매개하는 참진드기는 주로 숲과 목장, 초원 등에 서식하며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제주지역은 환경 특성상 봄철 고사리 채취와 오름 탐방 등 야외활동 여건이 용이해 매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되나

국민권익위, 경찰청에 법령개정 등 적극 행정 권고
최근 3년 제주서 음주운전사고 1006건… 19명 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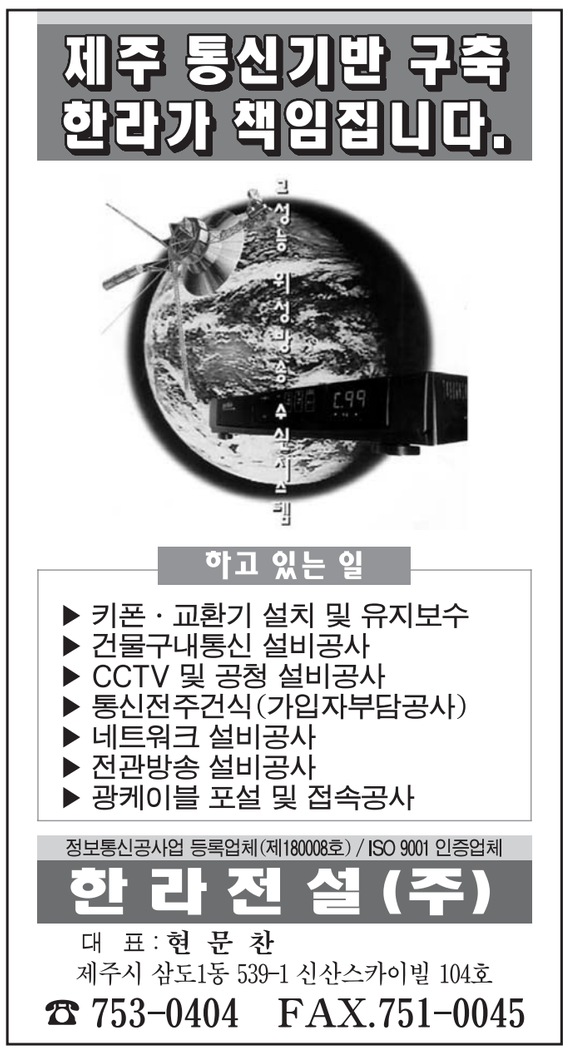
최근 음주운전 사고와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적극 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과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4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동이 잠기는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시범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배승아 양 사건 등 음주운전 사고 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경찰청에 적극 행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국에서 연평균 약 251명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달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006건 발생해 19명이 목숨을 잃었다. 김도영기자